■민족문화연구 제91호(2021.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9-415.
http://doi.org/10.17948/kcs.2021..91.389

1945-1948년 협동조합론의 전개와 그 특징*

오미일(吳美一)**

목 차

1. 머리말
2. 협동조합의 起源과 定義에 대한 다양한 인식
3. 협동조합운동의 前史에 대한 평가와 그 계승을 둘러싼 논쟁
4.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원칙 폐기와 정치활동론
5. 맺음말

국문초록

해방 후 협동조합운동은 경제활동의 영역을 벗어나 헤게모니 쟁탈전과 연관된 정치적 대중운동의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즉 신국가 건설과 민족경제 재건 방책을 둘러싸고 각 정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일반 대중을 획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개체였으므로 각 정파나 사회세력은 경쟁적으로 단위조합 설립과 연합체 조직에 나섰다. 당시 협동조합문제는 각 정당, 사회단체가 발표한 정강이나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 사안이었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론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이란 해방정국의 시대화두를 잘 보여주는 이슈이기도 했다.

해방 정국에서 협동조합의 定義를 어떻게 규정하고 협동조합운동의 前史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는 建國經濟 구상, 즉 식민경제기구와 그에 소속되어 있는 인적 유산을 어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교수.

떻게 재편 혹은 청산할 것인가란 현실적 문제로 연결되는 기본 인식이었다. 해방 직후 협동조합운동에 관계했던 사회주의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이 금융조합으로 대표되는 관제 조합과 1926년 협동조합운동사 이후의 소비조합이란 두 가지 종류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인식했다. 전자는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구, 후자는 식민지적 착취에 항쟁하는 조직이라고 보는 사회주의계열은 前史를 근거로 금융조합의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금융조합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경찰, 군청 직원 등 지역사회의 지배기구에 포괄적으로 연관된 이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금융조합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 시기 협동조합론의 주요한 특징은 그동안 이념적인 내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는 금과옥조로 준수해온 '정치적 중립' 원칙을 폐기한 점이다. 좌파와 우파 모두 신국가 건설을 두고 경쟁하는 해방 정국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임무나 기능도 예외적이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주제어: 협동조합론,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금융조합, 朴景洙, 宋乙洙, 印貞植(金永浩), 李辰永.

1. 머리말

한국의 민간 협동조합운동은 1920년대 이후 노동단체, 농민조합, 조선물산장려회, 재일유학생, 기독교・천도교 종교단체 등 다양한 세력에 의해 전개되었다. 협동조합은 대중의 경제적 이익 실현이란 경제적 목적에서 설립되었지만, 여기에서 나아가 사회운동이나 일제 지배에 대한 저항운동과 연결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934년 이후 일제가 민간 조합을 탄압하고 대체 관변 조합을 내세우면서 민간 협동조합은 하나도 남김없이 철폐되고 말았다.[1)]

1945년 10월경 해방 후 최초로 서울 성동구 소비조합이 설립되고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이 급속하게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창립이 짧은 시간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기에 2백여 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면서 축적된 조직이론과 실천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이다.[2)]

해방 후 협동조합 조직은 헤게모니 쟁탈전과 연관된 정치적 양상을 보이

1) 오미일,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69-275면.

2) 朴景來[朴景洙의 誤記-필자], 「協同組合運動의 展望」(상), 『中央新聞』, 1946.2.1.; 「새로운 構想으로 協同組合運動 展開」, 『新朝鮮報』, 1945.10.27.

기도 했다. 즉 신국가 건설과 민족경제 재건 방책을 둘러싸고 각 정파가 경쟁, 대립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은 일반 대중을 획득하기에 가장 적절한 매개체였으므로 각 정치세력이 경쟁적으로 단위조합 설립과 연합체 조직에 나섰던 것이다. 인민위원회나 대한독립촉성회 지부가 지역 단위 협동조합과 연합체를 조직한 것이 그 대표적 보기이다.[3]

이 시기 협동조합문제는 각 정당, 사회단체가 표방한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 사안이었다. 예를 들어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인민당은 1945년 12월 군정청에 건의한 물가안정대책에서 일제 통치하의 말단배급기관이던 町會와 愛國班을 대체하는 협동조합을 도시와 농촌에 급속히 조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4] 또한 1946년 2월 초에 열린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대회에서 채택된 〈긴급경제대책〉에는 식량문제, 물가문제, 협동조합문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은 식량문제와 물가문제는 행정권과 관련되는 문제임으로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은 직접 관계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운동을 좀 더 활발하고 광범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 나라 경제건설에서 그 '위대한 역할'을 강조했다.[5] 1946년 7월 민주주의민족전선은 강령에서 "협동조합은 민족경제 발전에 주요한 부문으로 되어야 하고 국가는 그 발전을 장려하여 국가 보조 및 저리자금 등으로 원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 행동슬로건의 하나로 '협동조합 실시'를 제시했다.[6]

또한 우파를 대표하는 한국민주당은 1946년 2월 정치외교, 재정경제, 勞農, 산업, 문화사회시설, 교육, 국민정신과 국방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政策細目을 발표했는데, 勞農 부문 가운데 '농업 경영의 자주적 협동조합화'를 제시했다.[7]

이와 같이 민족경제 재건을 위한 방안으로 협동조합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

3) 오미일, 「1945-1948년 협동조합의 설립 경로와 유형」, 『한국사연구』 187, 한국사연구회, 2019, 405-439면.
4) 「人民黨의 物價安定對策」, 『中央新聞』, 1945.12.12.
5) 「'民線'의 긴급경제대책」, 『自由新聞』, 1946.2.17.
6) 「民主主義民族戰線綱領」, 『人民評論』 2, 人民評論社, 1946.7, 34-42면.
7) 「七項目의 政策細目 韓國民主黨에서 決定發表」, 『東亞日報』, 1946.2.8.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란 연구주제는 그동안 한국사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다. 기존 연구를 보면 시기적으로는 주로 1950년대 이승만 정권시기에 집중되었으며, 주제별로는 농촌단체 재편성과 농업협동조합 설립을 둘러싼 재무부와 농림부의 갈등, 그리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각 농촌단체 사이의 헤게모니 쟁탈전, 농촌정책과 계몽사업 등에 집중되었다.[8] 해방 정국에 대해서는 최근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조직 추이와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9] 그러나 각 정파와 사회세력들의 협동조합론, 즉 협동조합의 사상적 배경과 인식, 이론적 기반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원래 협동조합이란 경제적 구성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행위주체이다.[10] 그런데 그동안 경제적 행위는 관심 대상이 되어 왔으나, 각 협동조합의 실천적 행위가 기반으로 하는 이념적 정신적 가치 혹은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다.

협동조합론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좌파, 우파, 중도파 등 정치적 입장별로 접근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해방 전후 세계적 차원의 전쟁과 체제 재편, 그리고 그에 맞물린 사상적 억압 기제로 인해, 사회정치적 활동과 그에 내재된 사상적 기반이 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존재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접근 방법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했으나 금융조합연합회에 몸담고 있는 경제이론가의 경우 그의 협동조합론을 좌파나 우파란 정치적 구도로 분석하는 것은 자칫 편향적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일제시기에는 경제적 권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일본 독점자

8) 이승억, 「8·15 후 南韓에서의 金融組合 再編過程: 1945-1958」,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임하, 「이승만정권의 농촌단체 재편성」,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213-246면; 최재성, 「해방—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 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65-198면; 김민석, 「1950년대 농업협동조합 정책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133-174면; 김민석, 「농업은행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7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249-284면; 류일환,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과 이승만정권」, 『서강인문논총』 55,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115-160면.

9) 김성보, 「해방 이후 협동조합운동의 부흥과 좌우대립」, 『한국협동조합운동100년사』 I, 가을의아침, 2019, 158-185면; 오미일, 앞의 글, 2019, 405-439면.

10) 朴鶴田, 「협동조합적 세계관의 기초」, 『協同』 45,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55.1, 14면.

본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에 복무했지만, 해방 후에는 인플레로 인한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생필물자 배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일차적이고 보편적이었다. 또한 좌·우파 모두 해방정국에서 협동조합이 가진, 대중동원의 매개체로서의 사회정치적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활용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여기에서 출발한 협동조합론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기준으로 한 협동조합론의 분류방식보다 해방 정국이란 특수한 시대상황에서 협동조합 활동가와 이론가들에 의해 제기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직후 시기는 신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정치적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가장 격화된 시기였다. 그러한 갈등은 특히 경제문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협동조합을 둘러싼 당시의 이슈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체제의 건설이란 시대화두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당시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각 사회세력들이 추구한 협동조합운동이 원용한 이론적 기반과 경험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해방3년 시기의 협동조합운동이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의 두 가지 길 위에서 출발하여 단독정부 수립 후 종국적으로 어디로 향했는지 그 역사적 경과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협동조합운동은 해방 후 다양한 협동조합론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방3년시기의 협동조합론 분석은 한국협동조합운동사의 한 시기를 복원하는 실증적 작업이기도 하다.

2. 협동조합의 起源과 定義에 대한 다양한 인식

협동조합의 기원에 대한 인식은 그 개념[정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먼저 '협동조합의 본질은 인격적 결합체'[11] 혹은 '협동의 경제공동체'란 포괄적 개념으로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며 고려시대의 契나 조선시대의

11) 박동규, 「협동조합법 政府案에 대한 비판과 전망」, 『협동』 23, 1949.7, 27면; 「한국농업협동조합의 진로」, 『新天地』 9-10(통권 68호), 1954.10, 19면.

鄕約, 중국의 義倉制度 등을 협동조합 범주에 포함시켜 초역사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新民族主義史觀을 견지하고 조선국민당을 주도했던 안재홍은 금융조합은 '돈의 두레'인데, 두레의 원형은 音律歌舞를 하며 神을 기쁘게 하고 福을 빌어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번영을 구하는 마한시대 이래의 神事的 武士團의 遺俗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12] 한국 협동조직체의 기원으로 契를 언급하는 견해는 드물지 않지만, 대개 현대적인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지는 못한 채 원형적인 구조로 지속되었다고 보았다.[13]

당시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자본주의경제 곧 대생산의 발달 과정에서 파생되는 조직체'라고 하여 자본주의 이후의 경제적 결사로 한정했다. 이는 좌파, 우파란 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대체로 수용되었다.

경제학을 전공한 이론가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는 명확했다. 대표적으로 金永浩[印貞植]는 "협동조합이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의 필연의 산물"로 자본주의제도의 발달과 때를 같이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14]

일제시기 전남 나주 潘南金融組合의 중역을 역임한 鄭庚得도[15] "현실적인 협동조합운동은 어떠한 정신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그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정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인격적 결합이라고 하는 까닭의 연유는 인격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독립소

12) 安在鴻, 「祖國의 守護는 民衆協同의 힘으로」, 『協同』 21,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9.3, 33면.
13) 金榮鎬, 『協同組合運動—그 發展과 우리의 方策』, 民潮社, 1968, 126면.
14) 金永浩, 『協同組合論』, 博文出版社, 1948, 104면. 金永浩는 마르크스주의 농업경제학자이자 일제시기 제4차 조선공산당 일본총국에서 활동했던 印貞植의 필명이다. 이 책에는 김영호에 대해 "1908년생, 1930년 3월 호세이대(法政大) 경제과 출신, 1932년부터 도쿄, 교토 등 대학원에서 경제문제 전공, 8·15 이후는 주로 서울에서 농업문제 연구"로 소개되어 있다[〈저자 약력〉 참조]. 그러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나 다른 기록에는 출생연도가 1907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호세이대 이후의 학력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정식은 일제 말 검거되어 전향했으나, 해방 후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간부,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194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다시 전향했으며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6, 역사문제연구소, 1989, 327-333면; 「印貞植氏轉向」, 『동아일보』, 1949.11.29.
15)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1935-1939판), 東亞經濟時報社. 정경득은 1929년 3월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 1933년 초 졸업 후 바로 금융조합에 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法專合格者」, 『매일신보』, 1929.3.30.; 『조선총독부관보』(1879호), 1933.4.17.

경영과 가계경제의 결합을 의미함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예컨대 산업협동조합은 독립소경영에 기반하며 신용협동조합은 가계경제에 기초한 것이니, 협동조합원은 추상적인 인격이 아니라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산업적 소비경제적 조건에 위치하며, 또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산업적 경제적 조건은 일반적인 경제관계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16] 이는 경제학 이론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정한 협동조합 개념이다. 그는 '사회구성의 基底인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대립과 통일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의 自己運動을 분석해야만 협동조합운동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적 유물론에 근거한 입장임을 알려준다.[17] 咸安組合 郡北支所의 李逢春도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출현한다고 파악했다.[18]

정경득과 이봉춘은 금융조합 관계자로, 협동조합이 역사적 단계인 근대 자본주의체제의 이윤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단체로 출현했다고 본 점에서는 의견이 동일했다. 초역사적 통시적인 상호부조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협동조합을 규정한 안재홍의 접근 시각과는 달랐던 것이다.

반면 基督教新民會 발기총회 조직부장(1945.12),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산업부 부장(1946.6)으로 활동하고 있던 목사 유재기는 "협동조합은 서로 돕고 서로 붙드는 정신을 떠나 남을 害하는 일에만 몰두하야 이윤 취득에만 정신을 파는 관념을 개선하야 새로운 사람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남을 죽여 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협동과 사랑과 공영으로써 불평과 계급이 없는 새 사회를 협동조합으로써 실현하자는 것"[19]이라고 주장했다. '싸움과 착취'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사회모순인데 이를 협동, 사랑, 공영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초역사적으로 크게 확장한 것이다. 이에 사회주의자 朴和寧이 이는

16) 鄭庚得, 「近代協同組合論의 一齣」, 『協同』 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10, 40면.
17) 그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단계에 상응함으로 본원적 자본축적기, 산업자본발달기, 독점금융자본기, 사회주의체제기의 협동조합 등으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鄭庚得, 같은 글, 39면.
18) 李逢春, 「協同組合運動과 政治」, 『協同』 2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9.5, 53면.
19) 유재기, 『협동조합조직론』, 基督教興國兄弟團出版部, 1946. 김병희 편, 『세대를 뛰어넘는 경계인 -虛心 劉載奇牧師遺稿集』, 예영커뮤니케이션, 2011에 재수록, 442-443면 참조.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 성경 중의 一節을 그대로 인용한 感이 들며, 이와 같은 新社會創設論은 교회 내에서는 성립될는지 모르나 협동조합론으로서는 아무런 흥미조차 느낄 수 없다고 혹평했다.[20] 협동조합의 定義에 대한 두 사람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조선인민당 경제부장, 민주주의민족전선 경제대책연구위원회 위원이자 협동조합전국연합회 임원(총무부)인 宋乙秀는[21]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적 정신을 기초로 한 근로대중의 결합으로서 意識的 경제운동을 전개하여 대중의 사회적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체'라고 규정했다.[22] 그는 "협동조합은 근로대중이 받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안,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같은 처지에 있는 인민층이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착취 없는 경제제도를 아울러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직"이라고 주장했다.[23]

송을수는 협동조합의 주체로 근로대중, 인민을 강조하고, 협동조합운동은 이들의 경제적 향상을 위한 의식적 경제운동이라고 인식했다. 반면 불합리한 현실 사회주의제도를 기독의 근본정신으로 개량시키려는 기독교사회주의를 추구한 유재기는 '개인' 간의 사랑, 협동으로 불평과 계급이 없는 새 사회를 협동조합으로 실현하자고 했다. 양자 모두 현재의 착취를 끊을 대안으로 협동조합을 말하고 있으나, 그 이론적 맥락은 완전히 달랐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협동조합의 기원을 시간적으로 고대에서 찾는 견해도 존재했으나, 정파적 입장에 관계없이 대부분 자본주의 출현 이후로 보았다. 前者의 초역사적인 시각이 인적 유대와 공동체적 결합 등 非物質的 사회관계, 정신적 측면에 기준을 두었다면, 後者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사회경제적 산물이란 점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것이다.

---

20) 朴和寧, 「현단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의 의의와 當面課業—남조선농촌협동조합운동을 중심으로」, 『朝鮮經濟』 2-3(통권 9호), 조선경제사, 1947.6, 306면.

21) 「朝鮮人民黨 部署를 決定」, 『中央新聞』, 1945.11.26.; 「協組全聯期成會」, 『中央新聞』, 1945.12.13.; 「斯界의 權威를 總網羅」, 『자유신문』, 1946.2.26. 일제시기 송을수는 신간회 교토지회(1927), 교토조선청년동맹(1928)에서 활동했으며, 제4차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22) 宋乙秀, 「協同組合運動에 대하야 勤勞大衆에게」, 『新世代』 창간호, 서울타임스사출판국, 1946.3, 34면.

23) 宋乙秀, 같은 글, 33면.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체제의 파생물로 보는 경우에도 정치적 지향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격이나 개념에 대한 인식은 분화되었다. 서구에서 협동조합의 개념은 대개 자유주의경제학, 사회주의경제학, 협동조합주의계열의 견해로 나뉘었다.[24] 해방정국에서 자유주의경제학을 이론기반으로 한 우파는 자본주의를 긍정하며 협동조합을 자본주의의 부산물로 인정하고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분배방법의 수정을 목적으로 했다. 예컨대 소비조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요 이상의 寄生的 요소를 배제하여 公正價格을 수립하는 것이며, 신용조합은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여 高利貸付를 배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다.

사회주의자들은 협동조합이 자본 집중에 의한 생산수단의 고도화와 대경영의 성립 등에 대응하여 소상품생산자나 노동계급의 조직으로서 성립된다고 보았다. 협동조합을 자본주의경제의 모순을 보완하는 기구로 보는 점에서 우파와 좌파의 입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점은 사회주의자들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조직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점이 없지만,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계획경제의 일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존속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체제와 생산양식에 따라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부여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이는 일제시기 YMCA 농촌부 간사로 활동하며 덴마크의 농촌운동을 시찰하고 돌아와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던 洪秉璇이었다. 그는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협동적으로 같이 잘 사는 자작자급의 경제를 세워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문제를 協同組合主義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25] 1949년 전진한·이순탁·함상훈 등이 추진

24) 朴東奎, 『協同組合槪論』, 金龍圖書株式會社, 1952, 19-30면; 홍병선, 『농업협동조합강화』, 승문사, 1958, 8-9면. 이봉춘 역시 협동조합의 본질을 첫째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고 그를 보강하는 자본주의 보강의 경제기구, 둘째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는 계급투쟁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보강의 기구, 셋째 양자를 절충하는 개량주의 경제기구로 나누어 파악했다. 이봉춘, 앞의 글, 1949.5, 53면.

25) 홍병선, 『농촌협동조합과 조직법』, 광문출판사, 1947, 11면. 한편 협동조합주의는 19세기 전반 로버트 오웬 등의 조합사회주의에서 유래하는데, 협동에 의해 사회를 개선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여 협동사회를 건설하려는 主義이며 협동조합운동은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피압박계급

한 협동조합운동사 재조직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이 단체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 요컨대 해방정국에서 좌파와 우파는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기능, 즉 인플레에 대응하는 물자보급기구로서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이후에 서술하듯이 협동조합을 대중동원의 매개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좌파와 우파의 인식 차이는 建國經濟 구상과 관련하여 식민경제체제와 그것을 유지해온 기구들 그리고 그에 소속되어 있는 인적 유산을 어떻게 계승 혹은 청산할 것인가란 당면문제에서 크게 부각되었다.

3. 협동조합운동의 前史에 대한 평가와 그 계승을 둘러싼 논쟁

해방 직후 실천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운동에 관계했던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운동의 前史에 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사회주의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은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이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1946년 2, 3월경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식량대책연구위원회 위원, 농업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李辰永은[26] 첫째 금융조합, 산업조합과 같은 官製 협동조합과 둘째 1925, 1926년

을 해방시키는 운동의 한 분야라고 본다. 프랑스 협동조합주의의 대표자인 샤를르 지드(Charles Gide)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이윤을 박멸하려고 하는 연합단체'라고 규정했다. 박동규, 앞의 책, 1952, 26-27면.

26) 「'民戰' 食糧對策委員 選定」, 『중앙신문』, 1946.2.27.; 「民戰 各部門委員을 決定」, 『자유신문』, 1946.3.4.; 「民戰 제1차 農業問題硏究委員會 開催」, 『조선일보』, 1946.3.11. 농업문제연구위원회는 총책임위원: 강정택·姜聖宰 휘하에 토지법기초분과, 농업계획분과, 농업기술분과, 임업축산분과로 구성되었는데, 이진영은 이청원과 함께 농업계획분과의 책임위원이었다. 이진영은 조선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1946년 5월 白南雲을 소장으로 하여 창립된 민족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소 주최 제3기 〈인문과학〉 강좌에서 「민주주의론」을 강의하기도 했다. 이 민족문화연구소 설립은, 1946년 3월경 '조선 민족의 당면한 제문제를 연구조사하기 위해' 우파 지식인들이 결집하여 李瑄根을 소장으로 내세워 태평통 소재 民友社 내에 사무소를 둔 민족문제연구소의 발족에 대응한 것이었다. 「文化消息」, 『漢城日報』 1946.3.9. 민족문화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양립은 해방 후 지식인사회 특히 학계 내에서 좌파와 우파의 분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진영은 대표적인 좌파 신진학자였다. 그는 「淸朝에 있어서의 土地制度와 農民狀態」, 「소련의 농업정책」 등의 글을 집필했다. 李辰永, 「淸朝에 있어서의 土地制度와 農民狀態」, 『民族文化論文集』 3, 민족문화연구소, 1947.4, 69-104면; 「쏘聯의 농업정책」, 『新天地』 1-10호(통권 10호), 서울신문사, 1946.11; 「광

이후부터 1930년대에 걸쳐 노동운동, 농민운동 또는 청년운동과 결부되어 조직되었던 각종 소비조합으로 나누어 파악했다. 전자는 일제의 조선 농민이나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사명으로 한 데 반해, 후자는 '일본의 식민지적 착취기구에 항쟁하기 위한 민중적 경제조직'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혁을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았다.[27] 그는 일제시기 협동조합의 두 가지 길 가운데 소비조합은 노동,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탄압에 의해 명맥을 잇지 못한 반면, 관제 협동조합을 대표한 금융조합은 당국의 열성적 추진에 의해 비약적 성과를 보게 되었다고 파악했다.

1945년 12월 조직된 협동조합서울시연합회에서 활동한 이광도 이진영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협동조합운동이 이론적으로 제기된 것은 1926년 鄭憲台, 錢鎭漢, 金成疇 등의 진보적인 활동" 곧 협동조합운동사가 시초라고 파악했다.[28] 그는 1923년 이후 조선물산장려운동에서 제기한 자급자족과 민족산업의 옹호 등은 다분히 협동조합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나,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이 생산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전개한 계급투쟁에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개량주의적 사상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물산장려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비조합이 설립되었고 조선물산장려회는 로치데일조합[29]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물산경성소비조합'

고: 第三期 人文科學講座」, 『獨立新報』, 1947.2.4. 그는 전석담 著 『朝鮮經濟史』(박문서관, 경제학전집 제3회 配本) 서평에서 "구태의연한 旣成史學界가 조선민족문화 발전의 물질적 토대를 생산하여 온 인민대중의 움직임을 완전히 결여하고 몇몇 聖主와 賢人君子가 獨擔한 것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신진 사학자들의 前進'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로 보아 그는 전형적인 유물사관 역사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李辰永, 「朝鮮社會經濟史硏究의 새로운 進展—全錫淡氏의 近業을 중심으로」, 『學風』 臨時增刊號, 1949.5, 53-63면.

27) 李辰永, 「協同組合運動의 두 가지 方向」, 『學風』 2-2호(통권 4호), 乙酉文化史, 1949.3, 29면; 「새로운 構想으로 協同組合運動 展開」, 『新朝鮮報』, 1945.10.27.

28) 이광, 「協同組合組織論」(上), 『新朝鮮報』, 1945.12.19.

29) 로치데일은 영국의 공업도시 맨체스터의 북북동 17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직물공업, 기계제조업과 석탄산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1844년 파업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진 플란넬 직물공 28명이 중심이 되어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조직했다. 이전 시기에 창립된 조합들이 대부분 오랜 시간 지속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폐점한 데 반해, 로치데일 조합은 수십 년 동안 성장했는데 그 성장의 주요 이유는 특히 '이용고에 따른 배당 원칙'을 만들어 준수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정광민 옮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2013, 128-148면, 174-198면, 285-303면; 金榮鎬, 앞의 책, 1968, 35-64면 참조.

조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열에서 물산장려운동이 결국 부르주아의 이윤 획득에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후 소비조합운동은 유야무야되었다.[30]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 자본가가 '排日的'이라고 경계하기도 했으나, 좌파인 이광이나 이진영 등이 협동조합운동의 기원으로 1920년대 초 물산장려운동과 연계되어 설립된 소비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1926년 협동조합운동사를 인정한 것은 조선물산장려회계열의 소비조합이 민족개량주의, 부르주아가 주도한 운동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해방 후 "신국가 건설 과정에서 바야흐로 第一義的으로 중대시되는" 금융조합의 재편 혹은 청산 문제로 직결되었다. 금융조합에 관한 논의는 조선농회나 조선식산은행 등 다른 기구들에 비해 비판론과 옹호론이 격렬하게 대립되었다. 이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와 산하 지방금융조합이 기구 면에서 가장 방대했고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거나 연계된 인적 유산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론은 대개 그 내재된 성격 즉 봉건성과 식민성에 집중되었다. 먼저 봉건성에 대한 비판의 논지는 금융조합이 '봉건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자본주의와 접촉하여 官府의 哺育 하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대적 협동조합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는 점이었다.[31]

그러나 비판은 주로 식민성에 집중되었는데, 먼저 조합의 운영이 협동조합의 기본강령인 민주주의적 운용과 배치되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즉 금융조합의 실제적 주도권을 가진 이사와 전 직원이 일제 당국에 의해 任免되었고, 조합원은 형식적인 조합장의 선임 권한밖에 없었는데 조합장은 지역 유력자로 실상 농민들을 수탈하는 계급에 속하는 자였다는 운영제도 상의 문제를 비판했다.

인정식[金永浩]은 일제가 독일 라이파이젠식 협동조합이라고 자랑하던 금융조합의[32] 치명적인 모순은 당연히 조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이 주체

30) 오미일, 앞의 책, 2008, 96면.
31) 鄭庚得, 앞의 글, 1946.10, 40면.
32) 金永浩, 앞의 책, 108면.

가 되지 못하고, 일본 독점 금융자본의 착취와 수탈대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조합의 주체는 조선총독부 관리와 일본 독점 금융자본가들이었으니, 농민들의 창발력이나 발언권은 허용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33] 그는 일제하의 금융조합제도에 대해 '似而非한 협동조합'이며 '제국주의적 정책의 한 수행기관'이라고 규정했다.[34]

사업 면에서의 식민성으로는 조합원 농민에 대한 금융조합의 대부금의 원천이 일본 독점자본의 유휴자본이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즉 '低利'貸付事業의 실상은 종래 농촌의 高利貸付關係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1930년 전후 대공황으로 유휴상태에 있던 일본 금융자본이 도쿄나 오사카보다 이자가 높은 식민지로 방출되어 금융조합을 통해 투하됨으로써 농민이 독점자본의 채무농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파악했다.[35]

또한 이진영은 일제가 자작농의 급격한 몰락을 저지하고 소작농의 자작농으로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가장 업적으로 내세우는 自作農創定事業에 대해서도 통계상으로 입증되지 못한 허구라고 비판했다.[36] 민주주의민족전선 토지문제연구위원이자 협동조합중앙연맹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朴景洙는 戰時期에 금융조합이 공출 숫자를 높여서 공제자금을 뜯어내고 거액의 국방헌금을 탈취해 납부하며, 농민의 피와 살인 곡식을 매로 치고 유치장에 몰아넣고서 강제로 뺏은 죄악은 생각만 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37]

좌파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은 이러한 일제시기 금융조합의 성격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연속되었다고 보았다. 즉 미군정 3년 동안 조합의 운영방침은 구태의연하고, 미곡 면화 등의 공출기관화되었으며, 단지 美製 통조림・사탕・양복・내의 등 잉여 공산품의 배급기관화 된 것이 약간 다른 점이라고 파악했다.[38]

---

33) 金永浩, 앞의 책, 128면; 印貞植, 「협동조합의 방향」①, 『自由新聞』, 1948.12.19.
34) 같은 책, 127면.
35) 이진영, 「협동조합운동의 두 가지 방향」, 1949.3, 32면; 인정식, 「협동조합의 방향」①, 『自由新聞』, 1948.12.19. 또한 김영호는 단일 중앙기구인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식산은행을 통해 일본의 소수 금융자본가들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다고 파악했다. 金永浩, 앞의 책, 1948, 126면.
36) 이진영, 「協同組合運動의 두 가지 方向」, 1949.3; 朴景洙, 「금융조합은 어데로」(상), 『현대일보』, 1946.6.29.
37) 박경수(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이사장), 「금융조합은 어데로」(中), 『현대일보』, 1946.6.29.

박경수는 금융조합이 해방 후 명칭을 협동조합으로 고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해 신용사업, 판매·구매사업, 이용후생, 계몽사업 등을 영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금융조합의 과거 사업을 변호하는 親일본제국주의자는 속히 반성하고 옳지 못한 이론을 삼가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39] 印貞植은 1948년 12월 당시 발표된 협동조합조직안에 대해 "종래의 모든 농업 관계 단체들을 통합하여 그 위에 협동조합이란 간판을 붙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이는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40]

당시 사회주의계열은 일제의 기구라 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인민을 위한 기구로 개혁하여 신국가 경제 건설에 최대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표명했다.[41] 그러나 "내부의 친일분자와 보수적 依他的 사상의 소유자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현재 지위의 보장과 私慾의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이란 美名을 이용하여 인민을 誤導하고 반동정객의 이용물로 만들려 한다"[42]는 점을 들어 사실상 금융조합의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 〈일반행동강령〉에서 "금융조합, 농회, 산업조합은 즉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되 농민이 관리하자"고[43] 주장했던 것은 인적 청산과 함께 농민주체적 기구로의 전환을 의미한 것이었다. 협동조합서울시연합회의 이광이 식민지의 半官 貸金機構인 금융조합을 서민적인 신용조합으로 개편하여 조합의 자금과 대중의 예금을 산업자본화하는 기구로 만들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44]

금융조합을 비롯한 일제하의 농촌단체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자만 아니

38) 이진영, 앞의 글, 1949.3.
39) 박경수, 「협동조합은 어데로」(상), 『현대일보』, 1946.6.28.; 「협동조합은 어데로」(중), 『현대일보』, 1946.6.29. "일제 시 농민 수탈의 한 개 도구로 되었던 金組가 그 기구와 운영 방법에 하등의 改變도 없이 명칭만을 협동조합이라 개칭하고 배급물자의 관청 대행 정도의 역할을 놀고 있었을 뿐 농민들 자신의 욕망은 이무 곳에도 반응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時事解說: 協同組合은 어떻게 되나」, 『새한민보』 3-5(1949년 3월 상순호), 새한민보사, 22면.
40) 인정식, 「협동조합의 방향」①, 『自由新聞』, 1948.12.19.
41) 박경수, 「협동조합운동의 전망」(상), 『中央新聞』, 1946.2.1.
42) 박경수, 「금융조합은 어데로」(下), 『현대일보』, 1946.6.30.
43) 「全國農民組合總聯盟 一般行動綱領」, 『産業勞動時報』 창간호, 朝鮮産業勞動調査所, 1946.1, 93면.
44) 이광, 「協同組合組織論」(下), 『新朝鮮報』, 1945.12.21.

라 조합에 재직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1922년경 경기도 양주군의 읍내 면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 抱川組合에 근무하고 있던 朴勝九는 "倭政 하에서도 협동조합적 형태를 표방하는 단체가 많았으나 진정한 의미로서의 협동조합은 아니었고, 해방 후 과거의 면목을 일신하고 新生하려는 意氣와 계획은 왕성하게 論謂되고 있지만 舊態를 탈각하지 못하고 時勢에 아부하여 目前의 보전에만 兢兢하고 직원의 給養을 위해 존속하면서도 농민을 내세우는 것은 왜정 시와 하등 변함없다"고 비판했다.[45] 반남금융조합의 정경득도 일제시대의 조직과 경영방침을 답습한 금융조합을 그대로 新민족경제 수립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단지 명칭의 변경이나 聲明書, 決議文 등으로 그 본질이 성립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46]

한편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1946년 1월 31일 각도 지부장과 회원에게 보낸 〈협동조합운동 전개에 관한 건〉에서 "금융조합이 조선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계통조직을 가진 협동조합이지만, 해방 이전 일제의 峻烈한 탄압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해방 이후 본질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개진했다.[47] 조선금융조합연합회도 과거 금융조합이 원래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自服한 것이다.

당시 조선금융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개편을 내세우면서 농촌계몽을 위한 문화사업으로 기관지 『협동』뿐만 아니라 각종 문학, 문화 분야 단행본을 집중발간함으로써 이미 논의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루어질 농촌 재편성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했다.[48]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입장과 달리 금융조합 내부에서도 그 前歷에 대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했다.

---

45) 朴勝九, 「新春懸賞原稿 當選作品特輯: 朝鮮農村再建과 協同組合」, 『朝金聯月報』 10,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7.4;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1922년판.
46) 鄭庚得, 「近代協同組合論의 一齣」, 『協同』 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10, 38면.
47) 「협동조합운동 전개에 대하야」, 『朝金聯月報』 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4, 2면.
48) 이승억, 앞의 글 참조.

하지만 금융조합의 이사, 조합장, 직원 뿐만 아니라 경찰, 군청 직원 그리고 학교 교사 등 지역사회의 지배기구에 포괄적으로 연관된 이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금융조합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으며, 심지어 찬양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함안조합 군북지소의 李逢春은 "일제시기 금융조합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일원이었으며, 비록 일제의 官制的 소산물이기는 하나 그 거래자들은 한 사람도 착취성을 直感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低利의 융자로 인해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해방된 자도 있었으며 물품의 공동구입이나 농기구 비료 등의 외상구입 시 低利의 元利金 할부지불로 도리어 誠意를 가졌다"고 매우 높이 평가했다.[49]

일제시기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부참사로 복무했으며, 해방 후 조선식량영단 이사·조선생활품영단 부이사장(1946-1948)을 지낸 元容奭도 이승만 정권 시기 농림부 차관을 역임하던 시절에 "昔日의 죄과는 일제 지배자들의 소치이고 韓人 직원에게는 그 허물이 없는 것"이라며 자신을 포함하여 금융조합 임원들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외국의 협동조합 정신을 본받아 창설된 금융조합의 조직과 기술을 커다란 재산으로 삼아, 기구를 새로이 조직하려는 구상을 버리고 기존 기구를 개편 정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0]

충북 청주사범부속국민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宋雲은 한 발 더 나아가, '농민 착취의 죄를 일제의 착취정책[환경]에 두지 않고 지엽적인 금융조합이란 기관이나 그 종업원에게서 찾으려는 것은 지성의 마비이고 착각'이라고 두둔했다.[51] 심지어 일제시기 금융조합에 대해 "창설 후 40년간 전국 농산어촌 서민 대중의 손을 잡고 협동정신의 배양, 협동조직기구의 확립을 통해 燦然한 업적을 남겼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농노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던

49) 李逢春, 「協同組合運動과 政治」, 『協同』 2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9.5, 57면.
50) 元容奭, 「협동조합을 싸고도는 諸問題」, 『地方行政』 2-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53.9, 35면.
51) 宋雲, 「局外者의 한 사람으로 協組의 新發足에 提言함」, 『協同』 22,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9.5, 80-81면. 그는 "해방 후 우리는 오랫동안 얽매어 있던 사슬을 끊은 흥분과 반감에서 자칫하면 무비판적인 旣成物에 대한 증오, 배척을 일삼게 될 만큼 지성을 상실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 속에 뛰어들어 사십년간 손을 잡고 살아온 것이 금융조합"이고, "젊은 금융조합인들은 그 속에 들어가 끓는 정열을 불쌍한 농민들을 위해 바쳤던 것"이라며 조합의 임직원을 마치 '농촌운동의 선구자'로 묘사하기도 했다. "심지어 관혼상제에 이르기까지 금융조합은 알뜰한 우리들의 '살림고문'이었으니 民意를 숭상하는 민주정치의 기반을 닦은 공적"은 다른 기관에 비할 수 없다고 치하하기도 했다. 금융조합에 대한 이러한 그의 평가는 "新生協同組合의 중심은 금융조합이 되어야 당연한 일"이란 논리로 귀결되었다.

4.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원칙 폐기와 정치활동론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협동하여 경제적 권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다. 그러나 해방 정국에서는 협동조합이 광범한 대중을 포섭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한 정치세력들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많았다.[52]

원래 협동조합은 경제적 이익단체를 지향하므로 '정치적 중립' 원칙은 이념적인 내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는 금과옥조로 준수되어왔다.[53] 그러나 해방 직후 남한에서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은 더 이상 원칙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정치활동을 주요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권장했다. 이 시기 협동조합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신국가 건설과 민족경제 수립을 당면과제로 내세우는 해방정국이란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52) 오미일, 앞의 글, 2019와 김성보, 앞의 글 참조.

53) 윤형근, 『선구자들: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그물코, 2013, 121면. 국제협동조합연맹은 1937년 제15회 대회에서 근대적 협동조합의 시조로 평가받고 있는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을 성공으로 이끈 기본적인 운영원칙을 이어받아 모든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7개 조항을 결정했다. 그것은 가입탈퇴의 자유, 1인1표제(민주적 운영), 출자에 대한 이자율 제한, 이용고에 비례한 잉여금 배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의 촉진, 현금거래, 그리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바뀌면서 1966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제23회 대회에서 '현금거래'와 함께 '정치적 종교적 중립' 원칙은 폐지되었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협동조합 간 협동'(연대) 원칙이 추가되었다.

1945년 12월 9일 전국 13도 대표[도별 2명씩]와 서울 각계 위원들로써 협동조합전국연합회기성회가 결성되었다.[54] 이 협동조합전국연합회기성회에서 결의 채택된 「조직방침요항」에 명시된 '협동조합의 이념'에는 해방 직후 사회주의계열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운동론이 잘 집약되어 있다.

① 협동조합은 대중적 자유적인 인적 결합으로서 각자 평등한 권리와 의무로 조합 사업의 운영에 참여하며 사업의 非자본주의적 경영으로 조합원에게 평등한 이익을 향수케 함
② 협동조합은 대자본의 專制的 投機的인 惡弊 및 자본가적 諸기업의 防過 除去에 노력하며 奸商과 謀利輩를 배제하고 戰後經濟에 적극 협력하야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로 함.
③ 협동조합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위한 계획경제 수립에 협력하며 산업경제기구(특히 농업경제)의 근본적 개혁에 의하야 획기적 增産과 국민의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旣成 經濟機構를 가능한 범위에서 此를 이용하여 民族自主經濟 건설에 적극 협력함
④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일상경제생활의 便益을 도모하며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향상을 촉진함
⑤ 협동조합은 未組職 大衆과 조합원의 사회적 의식을 앙양하며 조직적 정치적 훈련과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에 協力함[55]

①, ②, ④항은 경제적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목적과 역할, 기능을 일반적 수준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의 '사회의식 고양'과 '정치적 훈련'을 통해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에 협력해야 한다는 ⑤항은 일반적인 협동조합론과 차별화되는 내용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특수한 상황 즉 신국가

54) 전국 각지에서 소비조합 설립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힘입어 1945년 11월 하순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의 전국적인 통제지도기관 조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945년 12월 5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서울시인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전국연합회기성회를 결성했다. 12월 9일 전국에서 40여 명의 대표가 모여 작성된 취지서와 조직방침요강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북한지역을 포함한 13도 대표 26명과 서울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旣成委員 43명을 선출하여 협동조합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생산, 소비를 직접 연결」, 『中央新聞』, 1945.12.7.; 「협동조합전국연합회 발기회」, 『서울신문』, 1945.12.7.; 「協組全聯期成會」, 『中央新聞』, 1945.12.13.; 「協同組合全聯發起」, 『自由新聞』, 1945.12.13.

55) 박경수, 「협동조합운동의 전망」(상), 『中央新聞』, 1946.2.1.

건설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은 선진국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기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1946년 3월 협동조합전국연합회를 재편하여 출범한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은[56] 시국 현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1946년 6월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은 "이승만씨를 중심한 徒輩들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하루라도 속히 전국민 주통일정부가 수립되지 않고서는 쌀과 나무와 일용생활품을 구할 수 없음을 인민들은 생활을 통해 명확히 알고 있으니, 일반 인민의 생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 도배들의 야욕적 모략을 그 맹아에서부터 분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57] 이는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이었다.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의 정치활동은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었던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그리고 이후에는 통일정부 수립에 관해 민주주의 민족전선 소속 여러 사회단체와 보조를 같이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1947년 4월경 미소공동위원회 속개에 대해 "재개되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은 오직 삼상 결정의 총체적 지지와 협력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분자들은 民生을 塗炭의 深淵에 몰아넣으려는 반동배"이니 우리는 이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민생문제와 경제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성공을 통한 체제 안정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었다.[58]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하고 남북분단이 현실화되어 가는 1948년 1월에도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은 미·소 양 군대의 동시 철수와 남북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59] 1948년 8월경에는 "남북지도자회의에서 남북총선거로 조선최고인민회의 창설과 통일중앙정부 수립 결의는 정당

56) 「協組中央聯盟 昨日結成大會」, 『自由新聞』, 1946.3.16.; 「協組中央聯盟 十五日結成大會」, 『중앙신문』, 1946.3.13.
57) 「協同組合中央聯盟 談, 單政陰謀排擊」, 『現代日報』, 1946.6.8.
58) 「共委 再開에 뜨거운 감사, 협동조합연맹」, 『독립신보』 1947.4.27.; 「共委 再開와 各界의 反響, 協同組合 談話」, 『독립신보』, 1947.5.16.
59) 「兩軍撤兵 要望, 協組에서도 聲明」, 『朝鮮中央日報』, 1948.1.28.

한 결정"이라고 지지하고 그 임무 달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60] 서울시협동조합도 1948년 4월 초 산하의 30여 개 단위조합을 망라하여 '구국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남북회담 추진으로 통일정부 세울 것, 美 帝國의 조선을 식민지로 하려는 單選單政을 쳐부술 것"을 결의했다.[61]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부이사장 송을수는 과거 다른 자본제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조선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신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경제적 건설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의 건설을 해야만 할 상황이며, 이때 근로계급이 새로운 경제기틀을 만드는 데에 가장 적합한 조직이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했다.[62]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이사장 박경수는 협동조합이 가장 광범한 대중을 포섭한 조직이며, 특히 소비조합의 경우 일상생활품을 취급하는 까닭에 남녀노소 광범한 대중, 그 중에서도 가정부인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점을 주목했다. 조합을 통하여 隋時로 토론회나 좌담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신문이나 기타 출판물을 활용하여 정치노선의 선전과 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이 민족통일전선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63] 사회주의계열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협동조합이 새 조선의 경제적 건설의 일익의 담당자'라고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측면만 아니라 그 조직적 성격과 기능 면에서 대중적인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실천에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64]

당시 사회주의세력이 견지한 협동조합의 정치활동론은 1866년 마르크스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인터내셔널대회에 제출한 "협동조합운동을 계급 수립에 기초를 둔 現社會를 변혁하는 힘의 하나로 인정"한다는 결의에 근거했다. 그러나 동시에 마르크스는 이 결의에서 협동조합만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할 수 없으니,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혁이 전제되어야만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이윤을 말소하고 완전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60) 「南朝鮮 選委號召 支持, 협동조합중앙연맹」, 『朝鮮中央日報』, 1948.8.26.
61) 「서울市協同組合 救國鬪委를 조직」, 『新民日報』, 1948.4.10.
62) 宋乙秀, 「협동조합운동에 대하야 근로대중에게」, 『新世代』 창간호, 1946.3, 34-35면.
63) 朴景洙, 「協同組合運動의 展望」(中), 『中央新聞』, 1946.2.2.
64) 이광, 「協同組合組織論」(下), 『新朝鮮報』, 1945.12.21.

고 밝혔다.[65] 이는 협동조합운동의 정치운동으로서의 보조적 역할, 즉 정치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한 것이다.

레닌이 1910년 코펜하겐 회의에서 제출한 결의도 마르크스와 같은 맥락인데, 역시 협동조합 관련 활동가나 이론가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다. 즉 레닌은 "협동조합[소비조합]은 파업과 공장 폐쇄, 정치적 박해에 際하야 노동자를 支持하고 推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대투쟁에 비상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협동조합[소비조합]운동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개선은 생산수단이 자본가와 지주의 수중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제도 하에서는 극히 僅少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66]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대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67] 태도를 견지했다. 朴和寧은 '협동조합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상당한 기간 동안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운동 지도자들에게, 이는 많은 부르주아 개량주의와 기회주의자들이 강조해온 바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협동조합운동은 판매, 구매, 利用 등의 경제활동을 진행하면서도, 인민적 민주정권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하고 민주정권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조직사업과 계몽운동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8] 그는 현단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계몽선전사업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무리하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지나친 정치적 편향을 경계했다. 즉 협동조합 간부가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조합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적에게 공격의 구실을 제공하여 오히려 조합을 약화시키며 위기에 빠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朴和寧은 민주운동 지도자들이 "경제적 이익과 생필품 배급을 위한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정권이 수립되지 않는 한 그 근본적 해결을 볼 수 없는 운동"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운동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이 休眠狀態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65) 朴景洙, 「協同組合運動의 展望」(下), 『中央新聞』, 1946.2.5; 朴和寧, 앞의 글, 1947.6, 306면.
66) 朴和寧, 앞의 글, 1947.6, 306면.
67) 朴文圭・安東赫・朴景洙, 「조선경제 건설의 제문제」, 『조선경제』 1-5, 조선경제사, 1946.8.
68) 朴和寧, 앞의 글, 1947.6, 305면.

이는 협동조합운동이 대중의 경제적 또는 일상생활 면에서의 요구와 결부시켜 조직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沒覺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파들도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원칙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계열에서 대중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독촉협동조합' 설립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은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이었다.[69]

咸安金融組合 郡北支所의 李逢春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이 제시한 운영원칙 즉 현금매매, 민주적 통제, 배당과 출자금의 이자 제한, 가입탈퇴의 자유, 교육 등에서는 별 논쟁이 없으나 조합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70] 그는 1947년 협동조합주의를 내걸고 결성된 일본 국민협동당과 영국의 협동당이 의회와 정부에서 활발한 정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정치적 중립 원칙'은 연구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협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동조했다. 그러면서도 협동조합이 "계급투쟁혁명세력과 합류한다면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은 합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니 대중적인 경제단체가 지하적 존재가 되는 것은 비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민위원회 계통의 협동조합이 현재 간판조차 볼 수 없는 현실을 예로 들며 협동조합의 계급투쟁을 비판했다. 우파도 협동조합을 정치활동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지만, 좌파계열 협동조합의 계급투쟁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5.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협동조합론의 구도와 이슈,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협동조합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의 협동경제체에서 찾는 견해도 존재했으나, 좌·우 정파적 입장에 관계없이 모두 자본주의 출현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 서구에서는 대개 자유주의경

69) 오미일, 앞의 글, 418-427면.
70) 李逢春, 앞의 글, 54면.

제학, 사회주의경제학, 협동조합주의계열의 견해로 나뉘었지만, 해방 후 남한에서는 좌파와 우파가 협동조합론을 주도했다. 좌·우 대립 정국에서 협동조합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기반은 매우 취약했고, 좌파는 협동조합주의를 개량주의로 치부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定義는 建國經濟 구상, 즉 식민경제기구와 그에 소속되어 있는 人的 遺産을 어떻게 재편 혹은 청산할 것인가란 현실적 문제로 연결되는 중요한 인식기반이었다.

해방 후 협동조합론에서 가장 주요한 이슈는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평가였다. 협동조합운동에 관계했던 지식인과 활동가들은 조합운동의 前史에 대한 평가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사회주의 지식인이나 활동가들은 일제시기 협동조합운동이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와 방향, 즉 첫째 금융조합, 산업조합과 같은 官製 협동조합, 둘째 1926년~1930년대 노동, 농민, 청년운동과 결부되어 조직되었던 각종 소비조합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했다. 전자는 일제의 조선 농민이나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사명으로 한 데 반해, 후자는 '일본의 식민지적 착취기구에 항쟁하기 위한 민중적 경제조직'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혁을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기구 면에서 가장 방대했고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거나 연계된 인적 유산이 적지 않았던 금융조합의 조직 재편과 인적 청산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비판의 초점은 농민들이 조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착취와 종속의 객체였다는 점이었다. 사회주의계열은 금융조합이 공출과 국방헌금 납부 등 戰時期 전쟁 동원에 앞장섰던 前史를 들어 사실상 금융조합의 해체를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융조합의 전현직 이사, 조합장,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 군청 직원 그리고 학교 교사 등 지역사회의 지배기구에 포괄적으로 연관된 이들은 대개 적극적으로 금융조합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새로운 기구를 조직하기보다 기존 금융조합을 개편 정비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 시기 협동조합론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 이념적인 내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는 금과옥조로 준수되어 온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폐기하고, 오히려 정치활동을 주요한 방침으로 내세우고 권장했다는 점이다. 이

는 신국가 건설과 민족경제 수립이 당면과제였던 해방정국의 '정치과잉'에 부응한 측면이기도 했다. 즉 협동조합 조직을 둘러싸고 과도하게 정파적 경쟁이 전개되었던 현상은 민간에서 경제적 권익단체로서 자율적으로 조직하는 일반적 양상과는 다른, 시대적 특수성이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獨立新報』, 『동아일보』, 『民族文化論文集』, 『民衆日報』, 『産業勞動時報』, 『새한민보』, 『서울신문』, 『新民日報』, 『新世代』, 『新朝鮮報』, 『新天地』, 『自由新聞』, 『朝金聯月報』, 『朝鮮經濟』, 『조선일보』, 『朝鮮中央日報』, 『中央新聞』, 『地方行政』, 『學風』, 『現代日報』, 『協同』.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Ⅰ, 국사편찬위원회, 1968.

김민석, 「1950년대 농업협동조합 정책담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133-174면.

_____, 「농업은행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72,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249-284면.

김성보, 「해방 이후 협동조합운동의 부흥과 좌우대립」, 『한국협동조합운동100년사』 Ⅰ, 가을의아침, 2019, 158-185면.

金永浩, 『協同組合論』, 博文出版社, 1948.

金榮鎬, 『協同組合運動—그 發展과 우리의 方策』, 民潮社, 1968.

류일환, 「1950년대 농업금융·협동조합 입법과 이승만정권」, 『서강인문논총』 55,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115-160면.

朴東奎, 『協同組合槪論』, 金龍圖書株式會社, 1952.

오미일, 『경제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_____, 「1945-1948년 협동조합의 설립 경로와 유형」, 『한국사연구』 187, 한국사연구회, 2019, 405-439면.

윤형근, 『선구자들: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그물코, 2013.

이승억, 「8·15 후 南韓에서의 金融組合 再編過程: 1945-1958」,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3.

이임하, 「이승만정권의 농촌단체 재편성」, 『역사연구』 6, 역사학연구소, 1998, 213-246면.

임영태,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회경제학자들」, 『역사비평』 6, 역사문제연구소, 1989, 327-333면.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정광민 옮김, 『로치데일 공정선구자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그물코, 2013.

최재성, 「해방-6·25전쟁 직전 시기 금융조합의 조직 재건과 그 중심인물」, 『한국근현대사연구』 43,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165-198면.

홍병선, 『농촌협동조합과 조직법』, 광문출판사, 1947.

_____ 『농업협동조합강화』, 숭문사, 1958.

【Abstrac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Theory and Its Characteristics from 1945 to 1948

Oh, Mi-Il*

After liberation, the co-operative movement escaped from the realm of economic activity and showed a pattern of a political mass movement related to the battle for hegemony. In other words, as political factions competed and confronted each other over ways to build a new state and rebuild the national economy, cooperatives were the most appropriate medium to win the general public, so each political faction or social force competed to form a unit union. At the time, the co-operative issue was an important issue that was not left out of the policy or policy announced by each political party and social group. In this regard, the recognition and discussion of cooperatives was an issue that showed the topic of the era of the liberation regime, such as the liquidation of the remnants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al system.

Socialist intellectuals and activists who were involved in the co-operative movement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recognized that the co-operativ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developed in two types and directions: the control union represented by the financial union and the consumer union after the history of the co-operative movement in 1926.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one of the seven principles of co-operatives set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Federation in 1937, was observed as a golden rule that prevents ideological internal conflicts and divisions. However, both the left and the right were active in political activities, recognizing that the duties and functions of cooperatives were exceptional in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 Professor, Institute For Korean Unification, Pusan National Univ.

Keywords: Theory of Cooperatives, Central Federation of Korean Cooperatives (조선협동조합중앙연맹), Financial Union (금융조합), Park Gyeong-su (朴景洙), Song Eul-su (宋乙洙), In Jeong-sig (印貞植), Lee Jin-young (李辰永).

접수일: 2021.03.30. || 심사일: 2021.04.16. || 게재확정일: 2021.05.20.